



#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숨겨진 진실

공공의료를 담보로 하는 경상남도의 돈놀이 행정

2013.03.11

김동근(연구원)

121-865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259-12번지 3층  
전화 02-778-4001,4002 팩스 02-778-4006 메일 psspawm@gmail.com 홈페이지 www.awm.or.kr

전국이 발각 뒤집혔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2월 26일 경상남도는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의료원이 매년 40~60억 원의 손실로 현재 3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며 폐업 계획을 밝혔고, 3월 8일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폐업을 강행하고 있다.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지역의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결정에 반대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개별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에 따른 폐업 논란으로 볼 수 없다. 진주의료원은 전국의 34개 지방의료원 중 하나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지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의료원의 향방은 경영 문제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공적 역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또한 폐업으로 인해 치료받고 있던 환자들이 입을 피해, 종사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 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진주의료원의 경영 상황 역시 경상남도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몇 가지 사실만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다. 정말 폐업이 불가피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상황인지, 경영 악화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등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불과 5년 전 대규모의 공공재원을 투입하여 확장한 의료기관에 대한 폐업이 이렇게 일방적이고 막무가내로 결정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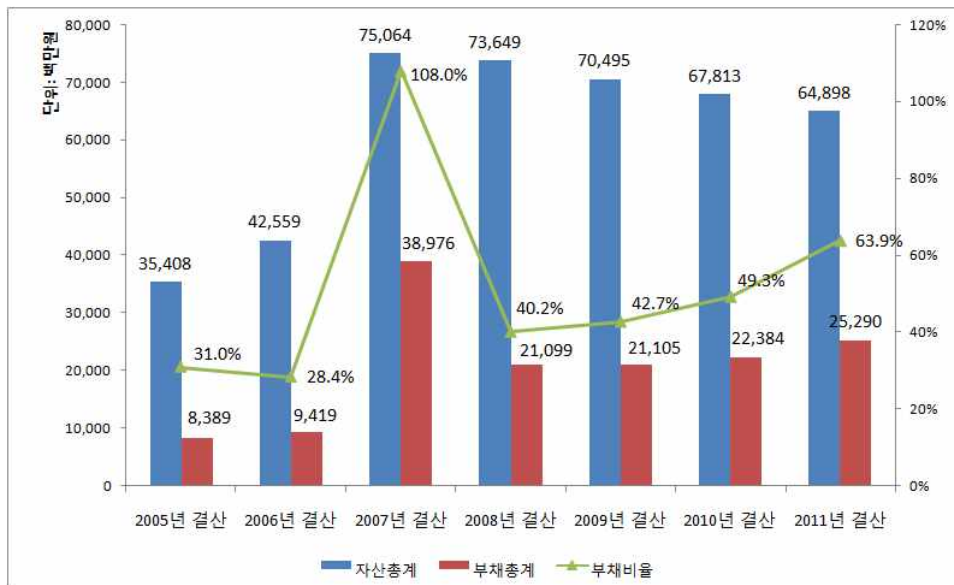
본 보고서는 진주의료원 경영위기설의 실체를 분석해보고, 폐업의 정당성을 검토한다.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 시도를 둘러싼 정황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본질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진주의료원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 1. 부풀려진 경영위기설: 정말 폐업이 불가피한가?

홍준표 경남도지사, 경상남도 측은 진주의료원의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진주의료원 사태의 과장이 커지고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등 각계에서 폐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음에도 전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3월 4일부터 6일까지 매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폐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폐업시키고 말겠다는 자세로 보인다.

매년 40~60억 원의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고, 현재 3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존속이 힘들며, 회생 가능성이 없는 진주의료원에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예산투입을 할 수 없고, 이대로 가면 3~5년 안에 진주의료원이 파산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과장이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1) 300억원의 부채를 감당하기 힘들다?



자료: 지역거점공공병원 종합정보시스템(<http://rhs.mw.go.kr>)  
진주의료원 홈페이지(<http://jinjumc.iezweb.co.kr>)

2011년 말 현재 진주의료원의 부채는 253억원이다.<sup>1)</sup> 2005년 84억원이던 것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채비율 역시 31%에서 64%로 상승했다.<sup>2)</sup> 부채의 규모가 증가했고 부채비율 역시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사실은 모두 빼놓고 300억원이라는 액수만을 내세운 것은 경영위기설을 유포하기 위한 꼼수다.

기업의 안정성을 부채의 절대적 액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경영분석의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안정성을 판단하는 일차적인 지표는 부채의 절대액수가 아니라 부채비율이기 때문이다. 진주의료원의 부채비율은 2011년말 현재 63.9%로 매우 안정적인 재무구조라고 볼 수 있다. 2011년말 현재 진주의료원의 순자산<sup>3)</sup>은 396억원인데, 즉 모든 부채를 상환한다고 청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396억원이 남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태를 ‘폐업할 수밖에 없는 경영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부채규모 혹은 부채비율을 통해 기업을 안정성을 판단할 때에는 기업의 규모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2005년에 비해 2011년 부채가 170억원 증가했고, 부채비율 역시 2배 가량 높아졌지만, 병원의 자산 규모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부채비율 증가가 안정성이 떨어졌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현대자동차의 부채가 74조원에 달하고 부채비율이 154%이지만 그것이 현대자동차의 경영위기를 의미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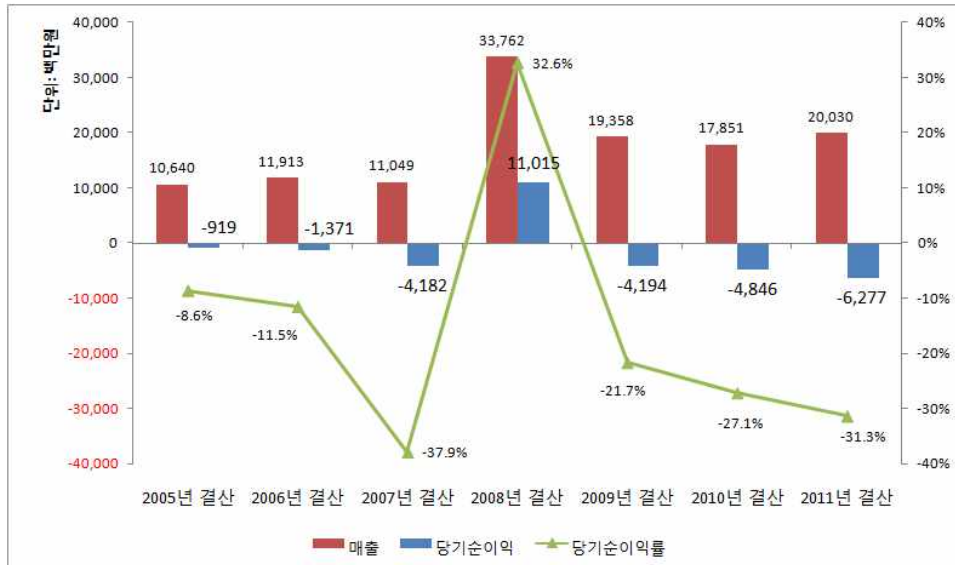
---

1) 본 보고서에서는 결산자료가 공개되어 있는 2005년에서 2011년까지의 경영현황을 분석한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2012년 말 진주의료원의 부채는 279억원이다.

2) 2007년 부채규모와 부채비율이 급등한 것은 병원의 신축 이전 과정에서 부채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3) 순자산 = 자산 - 부채

## 2) 대규모 손실로 인해 3~5년 안에 파산할 것이다?4)



자료: 지역거점공공병원 종합정보시스템(<http://rhs.mw.go.kr>)  
진주의료원 홈페이지(<http://jinjumc.iezweb.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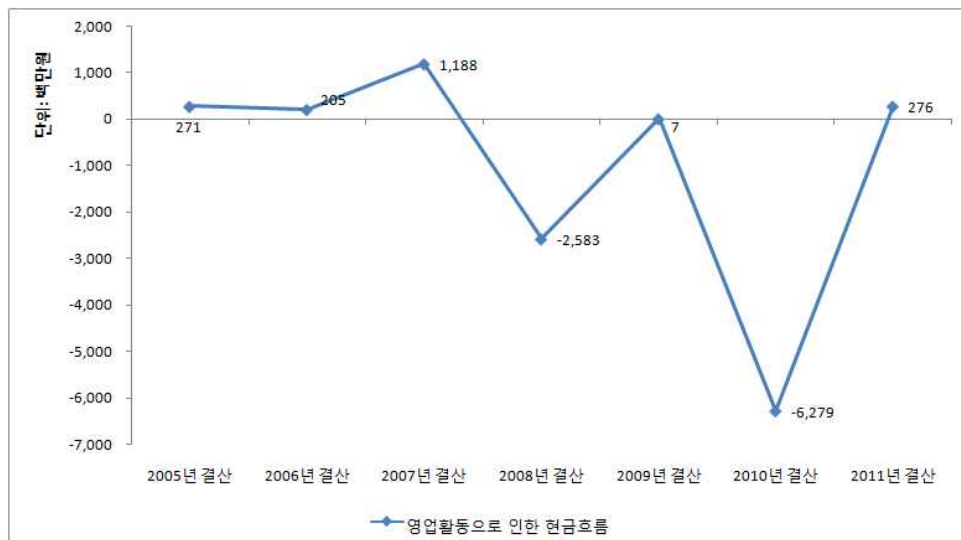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200억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동시에 당기순손실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6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경상남도의 주장대로 의료원 신축 이전이 본격화되는 2007년부터 매년 40~6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것이 폐업이 불가피할 정도의 손실은 아니다. 회계장부상 손실과 실제 현금 흐름상 손실 간에는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감가상각비다. 기물, 설비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생산하면서 노후한 만큼의 가치를 감가상각비라고 하는데,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손실로 계산되지만 실제 현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다. 진주의료원의 감가상각비는 2008년 신축 이전하면서 대폭 상승했는데, 매년 30억에 달한다. 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퇴직급여 역시 마찬가지다. 회계원칙상

4) 진주의료원의 경영손실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진주의료원은 지역의료의 공공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병원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일반 기업과 같이 이익·손실만을 근거로 의료기관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다만 본 장은 경상남도가 주장하는 진주의료원의 경영위기가설이 부풀려졌다는 것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이 부분은 일단 언급하지 않는다.

노동자의 퇴직시 발생할 퇴직금을 매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적립되는 퇴직급여 액수만큼 실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기 때문이다.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증가분만큼을 빼면 2011년 진주의료원의 현금 손실은 16억원으로 줄어든다.

이처럼 장부상 손실과 실제 현금 흐름상 손실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를 보완하여 분석하기 위해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2005년부터 2011년 사이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아래와 같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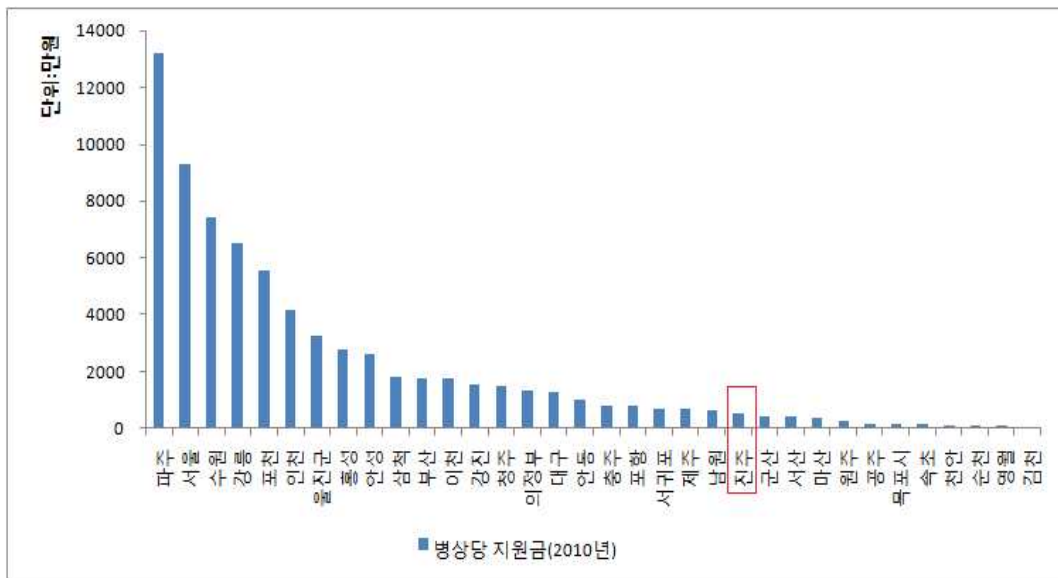
자료: 지역거점공공병원 종합정보(<http://rhs.mw.go.kr>)  
진주의료원 홈페이지(<http://www.jinjumc.or.kr/>)

6년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평균하면 실제 현금 손실은 연평균 9억 9,000만원에 불과하여, 40~60억원의 장부상 손실과는 차이가 있다. 결론적으로 3~5년 안에 진주의료원이 파산할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과장이다.

5) 2011년 공개된 재무재표에는 현금흐름표가 제출되지 않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통해 재구성한 것이다.

### 3)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예산투입?

전국에 34개의 지방의료원이 있고,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각 의료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자.



자료: 지역거점공공병원 종합정보시스템(<http://rhs.mw.go.kr>)

2010년 진주의료원의 병상당 지원금은 515만원으로 34개 지방의료원 중 23번째에 해당한다. 경상남도의 예산이 전국 16 광역자치단체 중 6번째로 많은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경상남도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더 이상 혈세를 지원할 수 없어서 폐업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 2.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를 담보로 한 경상남도의 돈놀이 행정이다

살펴봤다시피 진주의료원은 폐업이 불가피할 정도의 경영위기에 처해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가 주장하는 진주의료원 폐업의 정당성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경상남도는 도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거나 도의회의 논의를 거치지도 않고, 심지어 진주의료원 노동자들과도 협의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폐업을 발표했다. 이렇게 무리하게 폐업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 1) 제2청사 건립 공약을 위해 진주의료원을 희생양으로 삼은 홍준표 도지사

2013년 2월 현재 경상남도의 부채는 1조 3,488억원이고 2013년 경상남도 전체 예산은 6조 2,077억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 10억원 정도의 지원금<sup>6)</sup>을 아끼기 위해 많은 반대를 무릎쓰고 폐업을 강행하려 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의 부채 279억원이 도의 재정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하지만, 진주의료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상남도의 재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채는 진주의료원의 부채 전체가 아닌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다. 현재 남아있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은 117억원 정도로 2018년까지 연 10~20억 정도씩 상환하면 되는 정도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지 않으면 도에서 당장 279억원을 갚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홍준표 도지사와 경상남도가 의료원 폐업에 사활을 거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래 기사를 통해 상황을 유추해볼 수 있다.

6) 진주의료원에 대한 지원 현황은 아래와 같다.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도비 지원	11억 9,300만원	13억 6,000만원	12억 4,200만원



**홍지사 행보에 서부경남 민심 양분**  
도청 2청사 혁신도시 아닌 폐업 진주의료원에 예정

... 지난달 26일 나온 경남도의 진주 의료원 폐업 방침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원 건물에 경남도 서부청사(경남도청 제2청사)가 들어선다는 설이 나돌면서 일부 주민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등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4일 진주시 등에 따르면 도는 홍 지사가 약속한 서부청사를 의료원으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홍 지사는 지난달 19일 진주시를 방문해 가진 도민과의 대화에서 ... 자신이 공약한 서부청사가 들어설 곳은 진주혁신도시가 아닌 제3의 장소로 결정될 수 있다고 언급, 제2청사의 의료원 이전 논란을 촉발시켰다. 부지 선정과 신축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진주지역에서 홍 지사가 장담한 2년 내 업무까지 볼 수 있는 건물 마련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의료원 건물을 서부청사로 사용한다는 소문은 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 전문가들은 건물의 일부 리모델링만 이뤄지면 서부청사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

(2013.3.4. 국제신문)

이 외에도 진주의료원이 폐업할 경우 현 건물을 리모델링해 제2청사로 사용가능하다는 경남도 관계자의 발언이 전해지고, 진주의료원 인근 지역에서는 제2청사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부동산업계를 중심으로 돌기도 한다.

제2청사 건립은 도청의 마산 이전과 함께 홍준표 도지사의 핵심적 공약 중 하나다. 홍준표 당시 도지사 후보는 도청을 마산으로 이전하고 진주에 제2청사를 지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도청 터를 매각해 1조원 이상인 경상남도의 부채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그 자리로 제2청사를 이전하면 공약을 지켜 지역 민심을 얻는 동시에 이전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아도 되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sup>7)</sup>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7) 8일 입법예고한 개정안 부칙 제2호에 따르면 진주의료원 해산 시 잔여재산은 경상남도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다.

세금 지원의 절감은 부수적 효과에 가깝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는 홍준표 도지사가 경상남도의 부채규모 축소와 제2청사 건립이라는 모순적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진주의료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언급했다시피 진주의료원이 경상남도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금액은 연 10억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재정 악화의 책임이 진주의료원에 있다는 것은 과장된 언술이다.<sup>8)</sup>

## 2) 국비 200억원 전용? 부동산 투기? 경상남도의 돈놀이 행정!

제2도청 이전 문제와는 별개로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를 담보로 한 경상남도의 먹튀 행각이다.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 과정에서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국비 지원으로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신축 이전에 534억원이 투입되었는데 그 중 경상남도는 22억원의 부지와 92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했고 200억원은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았다. 이러한 지원은 진주의료원이 경남의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며, 대규모의 지원을 지역사회에 돌려주라는 의미다. 이전 5년만에 이루어진 일방적 폐업 결정은 의료공공성을 명목으로 지원받은 국비를 도의 재산으로 전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진주의료원 신축이전 사업비 확보 내역

구분	확보내역	금액	비고
계		534억 850만원	
출연금	교부세	200억 3,200만원	국비
	지방세	91억 6,600만원	도비
현물출자	경상남도 토지 출자	22억 1,050만원	
자체확보	지역개발기금 차입	220억원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8) 3월 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여영국 의원은 거가대교와 마창대교를 거론하며 ‘민간사업자에겐 수백억원의 최소운영수익(MRG)을 보장하면서 공공의료기관과 문화 관련기관을 타킷으로 공략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홍준표 도지사의 뜻대로 폐업이 현실화되면 경상남도는 막대한 수입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진주의료원의 순자산인 396억원이 경상남도로 귀속되는데 다 진주의료원 부지 가격이 대폭 상승했으므로 실제 수입은 훨씬 클 것이다. 진주의료원 부지의 공시지가는 취득당시인 2004년 6월에 비해 4배 상승했으며, 현재 공시지가 기준 부지 가격은 241억원이다. 장부상 토지가격인 58억원보다 183억원 더 높다. 실제 시세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개업자들에 따르면 주변 부지의 현 시세가 평당 150~30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의료원의 신축 이전에 경상남도는 114억원을 보냈다. 그리고 뜻대로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킨다면 579억원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다. 579억원에는 국가의 지원금 200억원과 부동산 가격 인상분 183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5년만에 5배가 넘는 수익을 거둘 수 있으니 크게 남는 장사를 하는 셈이다. 그러나 그것이 공공의료기관을 폐업하고 환자들을 억지로 쫓아낼 만큼 중요한 일은 아니다.

진주의료원은 325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으로 매년 연인원 약 20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39개 지역거점공공병원 중 하나로서 보호자없는 병실 운영,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무료 수술, 거동불편 독거노인 무료 방문진료, 지역사회 보건교육과 의료 지원 등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연인원 3만명이 넘는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민의를 받들어야 할 행정기관이 스스로의 수익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무리하게 폐업시키고 환자들을 쫓아내려는 발상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경상남도의 이러한 계획은 명백히 공공의료를 담보로 한 돈놀이 행정이며, 쌍용자동차, 하이디스 등 기업을 인수하여 쥐어짜기 방식으로 막대한 이득을 보고난 후 경영위기설을 퍼뜨리며 철수를 시도하는 외국자본의 먹튀행각과 닮아있다.

### 3. 사태의 올바른 해결 방안

진주의료원의 경영이 악화된 것은 2008년 시 외곽으로 신축 이전하면서부터였다. 병원 신축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 때문에 이자 비용이 급격히 증가했고 400병상 규모의 병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기수도료, 연료비, 소모품비, 외주용역비 등 유지비 역시 대폭 상승했다. 또한 병원 규모가 커지고 가동 병상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력 충원이 불가피했고 그에 따라 인건비 역시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외곽으로 이전한 이후 환자수는 기대만큼 늘어나지 못해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시 진주의료원 이전의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승인했던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경영 악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의료원 이전 때 보건복지부가 사업타당성 조사를 요구했음에도 진주의료원은 그 책임을 방기했고, 이후에도 의료원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도외시함으로써 문제를 악화시켰다.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경상남도가 독단적으로 폐업을 결정함으로써 지역의 환자들과 종사 노동자들을 곤경에 빠뜨린 것은 결코 올바른 해결책이라 할 수 없다. 경상남도는 2008년의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를 폐업의 근거로 들지만, 보고서의 결론은 진주의료원 폐업이 아니라 환자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적절한 지원을 통해서 진료 수준을 높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었다.<sup>9)</sup>

#### 1) 신축 이전으로 발생한 부채에 대한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진주의료원의 향후 전망은 나쁘지 않다. 병원 바로 주변 초전개발구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멀지 않은 거리에 혁신

9) 해당 보고서는 경상남도의 의료원 경영 개선을 위한 지원이 미흡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 등 공공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비 지원 없으며, 의료원의 경영 악화 해소 및 경쟁력 강화 등 운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도시가 건설 중으로 11개의 공공기관이 이전 예정에 있어 진주의료원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과제는 적절한 경제적·정책적 지원을 통해 진주의료원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시작으로 우선 폐업 결정을 철회하고 의료원 발전의 직접적 걸림돌인 지역개발기금 상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경상남도의 지원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상환을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는 의료기관에 대한 용자는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광역자치단체마다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경상남도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각 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 용자 상환 규정

자치단체	용자 상환 규정
경기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 상·하수도사업: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3년거치 2년 균분상환 - 기타 사업: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부산광역시	-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강원도,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충청북도: 투자비 회수기간 등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전라북도, 충청남도: 기타 사업은 투자비 회수 기간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음
경상북도, 전라남도	- 다음 중 하나로 할 수 있음: ①3년거치 2년균분상환, ②3년거치 5년균분상환, ③5년거치 10년균분상환
대전광역시	- 상·하수도사업: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그밖의 사업: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2) 경상남도, 의료원, 노동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한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폐업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번 사태를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역시 힘들어졌다. 의료진의 상당수가 이탈하였고, 병원장 역시 사퇴

하여 직무대행 상태다. 환자들 역시 강제로 쫓겨나거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폐업 시도를 없던 일로 하더라도 빠른 시일에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되기는 힘들 것이다.

차라리 이번 사태를 긍정적인 계기로 삼아 진주의료원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장기적 발전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한다. 의료원 신축 이전 이후 발표된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진주의료원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된 바도 있다. 관리·감독 및 지원의 당사자인 경상남도, 운영의 주체인 경영진과 종사 노동자, 의료원을 이용하는 시민 등 진주의료원에 관련된 모든 주체를 포괄하는 논의기구를 통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 이미 이번 사태의 주요 당사자인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노, 사, 정,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는 <진주의료원 공공병원 살리기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제 경상남도가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